

시선

사설

대학구조개혁평가, 우리의 민낯 드러내야 할 때

우리학교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돼 온 바가 아니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목전에 둔 지금 우리 경희의 현실은 모든 학내문제를 대학본부의 책임으로만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일까. 과연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이익만을 대학본부에 떠넘기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민낯’을 가지고 있다. 가령, 교수는 적게 가르치고 적게 연구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량지표를 반영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학교의 전임교원강의당비율은 전국평균인 58.9%에 크게 못 미치는 46.7%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3년간 논문 무실적 교원의 수는 전체 교원 수의 30%에 이르고 있다.

직원 사회는 점차 방대해져가고 있다. 대학주보가 수 차례 지적한 바, 우리 대학의 행정 거버넌스는 타대 대비 비대한 수준이다. 급기야 최근에는 우리학교 전체 직원 수가 1,000명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 지적돼온 학생들의 학점인플레이션 문제는 성적분포의 적절성 논란을 낳으며 우리학교 졸업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은 취업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취업률 현황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구성원 집단도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공동의 빠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교수사회는 책임시수를 늘리거나 연구실적평가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직원사회는 ‘거버넌스 개편’이나 ‘행정효율화’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하다.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에 당면한 학생들은 이 문제의 해결시점을 ‘나 졸업한 이후’로 꾸준히, 오랜 세월동안 미뤄왔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민낯을 공론화하기 꺼리는 사이에, 우리는 위기 앞에 직면했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재정구조는 재정수입 다각화 노력이 좌초되면서 순식간에 재정위기를 불러왔고,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방침 앞에서 A등급을 못 받아 강제로 정원이 감축될까 우려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물론,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대로만 모든 것을 맞출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학교가 우리사회의 일부인 이상, 거시적으로 돌아가는 사회흐름, 즉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대입정원 조정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라는 추세에는 발을 맞춰나갈 수밖에 없다.

주지하듯이 지표란 현실의 반영이어야 한다.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석상대의 꼼수가 아닌 현실개선이라는 정수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지금 우리학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밀봉되어 있다는 데 있다. 대학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상의 파악과 문제점의 도출 및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세부 문제점들은 커녕 우리의 현상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 없는 권리’는 ‘증세 없는 복지’만큼이나 허망한 구호다. 이제, 모든 구성원이 책임감을 갖고 서로의 민낯을 공론의 턱자 위에 올린 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다.

의학과 전속 교수 ‘당뇨병’ 복지부 연구과제 선정

미디어 여론동향 2015.1.19 ~ 1.2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플라자’에는 ‘우정원 추가 입사 가능할까요?’(2015.1.22)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글쓴이는 자취보다 기숙사에 거주하고 싶은데 학점은 3.57이라며, 우정원 추가 합격이 가능할지에 대한 글을 남겼다. 댓글로 “학점이 높은 것도 아니고 거리점수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합격하기 힘들겠지만 추가모집은 변수가 많다면 합격하기 기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주의 주제 - 학생회 장학금 대리수령 논란

‘밝은사회’ 위한 기초부터 바로 잡아야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지난 9일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에서 총학생회(총학)의 장학금 대리수령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단연 많은 ‘좋아요’ 수를 받으며 익명의 후속 제보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어 익명의 제보자가 우리 신문으로 제보를 해왔다. 기자가 학생지원처와 총학을 취재한 결과 장학금의 현금 대리 수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뤄져왔던 관행이었다.

취재를 시작하고 기자는 본부 측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의심의 여지없이 잘못된 관행이며, 장학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이기 때문이다. 깔끔하게 정리된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들며 배신당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잘못된 방법과 현금 수령 등의 특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은 진정한 대표자의 자세가 아니다. 장학금을 바른 곳에 사용했다 말한들 편법을 이용해 수령한 금액이며, 사용내역이 투명하지 않

아 불신만 생길뿐이다. 총학은 대표자로서 학생들에게 불신을 준 것에 대해 충분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총학 임원들만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총학 임원들에 대한 시선을 그동안 내려져오던 ‘관행’에 돌릴 필요가 있다. 취재 도중 그릇된 장학금 수령 방법이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말해, 다들 알고 있던 꽤나 오래된 얘기란 것이다. 문제인식이 있었음에도 개선의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장학금을 학생자치비로 사용하는 현 상황에서 장학제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공론화 된 이제부터라도 그동안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총학과 본부 측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근 학생사회는 총학 등과 같은 학생단체 운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있다. 이런 불신 문제는 학생사회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학과 자치기구 등도 더욱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제보자의 경우처럼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지적하는 등 속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자치기구 임원들에 대한 관심을 보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대학본부와 총학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은 제도의 문제를 잘 파악해 논의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바른 장학제도가 마련돼 학생들의 불신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부의 ‘이중잣대’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이화여대를 방문했다.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던 이화여대는 그 직후에 ‘동결’로 선회했다. 이후 연세대도 인하 카드를 끼내 들었다. 등록금 비싼 것으로 손에 꼽히는 대학들의 태도 변화의 배경은 여럿이다. 그중에서도, 교육부가 공식적으로는 등록금 상한선 2.4%를 제시했지만 뒤에서는 ‘반값등록금 완성의 해인만큼 자체하라’는 ‘자체’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대학구조개혁을 감안할 때, 사실 등록금 인상을 알아서 자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자조도 들린다. 등록금 2.4% 올렸다가, 정원 감축 철회를 맞으면 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과 연동되는 등록금 문제에서 대학들의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등록금 부담이 학생들에게 매우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교육에 있어 ‘속도보다는 방향에 주의해야 한다’는 말처럼, 그 방향이 걱정이다.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공장에서 생산하듯 알선하자는 이야기는 천박할 뿐이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다’라고 호명하는 셈이다.

지난 22일 교육부가 발표한 ‘정원조정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이런 우려를 실제로 바꾼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의 수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 수간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를 위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공장에서 생산하듯 알선하자는 이야기는 천박할 뿐이다. ‘대학은 취업사관학교다’라고 호명하는 셈이다. 나아가 문제를 진단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교원임용자수와 사범대학 졸업자수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고용불안으로 인한 공무원 선호추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당장 이 사업에 3년간 2,500억 원씩 총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특성화사업보다 서너 배나 많은 돈이 걸려있는 이 사업을 외면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몇이나 될까. 특히 그동안 등록금을 인상하고, 적립금을 쌓아온 대학일수록 최근의 상황에서 유리한 이 아이러니가 담滓하다.

당장 대학특성화사업에서의 가산점을 위해 4% 정원감축을 제시했던 우리학교가 이번 사업에서는 또 무엇을 포기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단지 하나의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교육부의 정책기조가 계속될수록 학문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정부기조에 따라 채찍(정원감축)과 당근(예산지원)에 휘둘리는 취업사관학교만 남는다. 이런 걱정에 교육부가 믿어달라며 진정성을 호소하는 상황에 할 말이 많지 않다. 교육공공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육부는 상지대를 비롯한 일부 비리재단 인사의 복귀문제에 대해 몇 달째 지키고 있는 침묵부터 깨길 바란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khunews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신진연구자 지원사업과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결과는 생명공학 및 응용미생물학 분야의 권위자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분자치료(Molecular Therap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경희의료원은 내분비대사내과교실 전속 책임교수와 분자생물학교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AHR 리간드에 의한 대사증후군 발병기전 및 진단법 개발’이란 연구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5년간 2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경희대 전속 교수, ‘당뇨병’ 복지부 연구과제 선정/세계일보, 2015.1.25) 이번 연구는 대사증후군의 조기진단법 개발과 임상진료 혁신에서의 사용을 위한 검증 연구,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발병기전 규명을 위한 것이다. 향후 대사증후군의 조기 진단뿐만 아니라 예방과 치료법 개발의 학문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는 대사성 질환의 강력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체내 활성 측정 진단법 개발, 실제 임상적 환경에서 검증하는 연구 진행, 환경오염물질의 체내에서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기전 검증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수)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12